



레바논

국제적 금융지원으로 국가부도 위기 모면

원조국들의 금융지원 덕분에 레바논의 경제전망이 다소 밝아졌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파리에서 열린 원조국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욕적인 경제개혁 계획을 밝혔으며,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만 한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구조의 취약, GDP의 180%에 이르는 310억 달러의 공적채무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인식도 개선과 신규자금 유입 등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원조국들 금융지원 활발

하리리(Rafiq al-Hariri) 총리가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원 하에 열렸던 레바논 원조국 회의에서 43억 달러¹⁾의 금융지원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레바논은 국가부도 위기를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걸프 협의회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이 28억 달러, 기타 국가 및 국제금융기구 등이 15억 달러를 지원할 원조국회의 금융지원 방식은 레바논 정부채 구입, 지원국 정부의 지급보증과 양허성 차관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총 43억 달러 중 31억 달러가 이런 방식으로 채무재조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그밖에 교육·보건 등 개발사업에 대한 아

1) 사우디 아라비아 7억 달러, 프랑스 5억 달러,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말레이시아 각 3억 달러, 카타르·바레인·이탈리아·캐나다 각 2억 달러, 벨기에 7,000만 달러, 오만 5,000만 달러, 아랍개발기금(ADF) 5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 3억 5,000만 달러, 쿠웨이트 투자은행(KIB) 1억 5,000만 달러, 아랍통화기금(AMF) 1억 달러, 그 외 2억 달러(일본의 1억 달러, 세계은행의 2억 달러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부분) 등임.

랍개발기금 차관과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유럽투자은행 차관을 포함한 12억 달러는 대출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3년 1월에 이미 말레이시아,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정부 발행 미 달러債 표시 국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지원을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동 국채의 금리는 5%, 만기는 1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외국은행을 포함한 은행들과 연금기금이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정부의 채무부담 축소에 협력키로 하였다. 국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상업은행들은 2년 만기의 무이자 국채 40억 달러 어치를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사회보장기금은 평균금리 12%인 27억 달러 상당의 보유 국채를 8%짜리 국채로 대체키로 하였으며, 공적채무 중 3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도 금리 4%의 파운드債 표시 국채 22억 달러 상당을 인수키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들에 힘입어 2002년에 33억 달러에 이르렀던 레바논 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액이 2003년에는 11억 달러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신인도 회복은 더 지켜보아야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덴마크는 레바논이 IMF와 중기 구조조정 협약을 맺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5억 달러를 약속한 프랑

스도 레바논이 IMF와의 지침에 따라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보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이 차질 없이 일정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국제신인도의 회복과 경제회생에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의 2003년도 긴축예산조치 의회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개혁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크다. 하리리 총리의 반대파들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금 인상, 공공 부문의 인원 감축 등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레바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거국적인 고통 분담과 정쟁 자체를 배경으로 하는 경제개혁 정책의 강력한 이행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를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금융계의 시각이다.

특히, 미국은 레바논 남부에서 접경지대의 이스라엘을 종종 공격하고 있는 이슬람 민병대 헤즈볼라(Hezbollah)의 활동을 중단시키라는 압력을 레바논 정부에 가하고 있어, IMF를 동원한 미국의 대규모 금융지원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아울러 중동 지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라크 문제도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레바논의 국가신인도 회복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제개혁 계획의 핵심은 재정건전화

경제개혁 계획의 핵심은 재정건전화와 공기업 민영화인데, 재정건전화는 상당히 많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공기업 민영화는 아직 결과가 신통치 못한 상태이

〈표〉 주요 경제지표

	2002e	2003f	2004f
실질GDP성장률(%)	0.9	1.9	2.4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5	2.5
환율(L£/US\$)	1,507.5	1,507.5	1,507.5
상품수출(US\$백만)	947	994	1,054
상품수입(US\$백만)	5,927	6,045	6,227
상품수지(US\$백만)	-4,980	-5,051	-5,173
경상수지(US\$백만)	-3,059	-3,057	-3,201
경상수지/GDP(%)	-17.1	-16.3	-16.1
외채잔액(US\$백만)	16,142	17,849	20,024
외채원리금상환(US\$백만)	2,699	2,982	3,276
외채상환비율(지급 기준)(%)	47.6	50.4	53.1

자료: EIU.

다.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통신면허 매각이 있다. 현행 사업자인 Cellis와 LibanCell의 사업권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입찰이 곧 실시될 예정인데, 현재 가입자가 80만 명에 달하는 레바논의 이동통신 사업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19개에 이른다.

레바논 정부도 이동통신을 포함한 민영화사업을 통해 2003년에만 50억 달러를 조달하여(S&P는 30억 달러 정도의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 정부의 부채상환에 활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전력, 용수, 항만, 항공, 담배, 카지노 등 민영화가 가능한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올라있으며, 이미 2002년 12월에는 레바논의 4개 수도망 중 북부망이 프랑스의 Ondeo社에게 팔렸다.

경제개혁 계획을 반영한 2003년 예산안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통신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은 9%를 삭감하는 긴축예산으로, 레바논 정

부의 낙관적인 전망으로는 재정수지 적자의 對GDP 비율이 2002년의 15.6%에서 2003년에는 7~8% 수준으로 낮아지고 2005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실제로 2002년 1~10월의 재정상황을 보면, 원리금 상환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지출의 36%에 이르는 적자를 보였으나,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일반재정수지는 재정지출의 20%에 이르는 흑자를 나타냈다.

단기적 전망은 불확실

재정개혁이 계획대로 진척되면 투자자와 국민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레바논 파운드貨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완화되어, 현재의 달러당 1,507파운드의 對달러 페그(peg)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금리도 더 낮아질 것이므로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2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해 4%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2003년에는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본드 발행과 양허성 차관 도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외채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혁 계획,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약속된 양허

성 차관의 집행 연기로 이어질 것이다. 요컨대, 원조국 회의의 성공으로 원활한 채무상환을 위한 대내외 유동성은 일단 확보되었으나, 정부와 의회가 의견을 일치시켜 꾸준한 경제개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레바논이 경제위기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강 준 수】